

December 23, 2006

Jo!ns

"평화 추구 방식 논의 없이 평화=최고선 단정은 독선"

한국 사회에서 중도 노선을 추구하는 지식인 모임인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이부영)이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핵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이흥구 본사 고문(전 국무총리.사진)이 했다. 다음은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 요약.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윤여준 전 국회의원,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윤경로 한성대 총장, 이흥구 전 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화해상생마당 제공]

◆ 주제 발표="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작금의 혼란은 한 가지 원천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평화.통일.자유.자주 같은 목표 간의 균형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화'는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평화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무작정 '평화=최고의 가치'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독선이다. 통일과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민족국가'와 '민족사회'를 구분해야 한다. 사회는 국가보다 기능적으로 시간상으로 앞서는 단위다. 특히 지금까지 두 가지 이질적인 국가체제가 공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의 1차 목표는 통일국가 수립보다 점진적인 사회통합이 돼야 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우리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확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핵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핵을 유지하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북한이 생존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보다 자발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대답이 마련될 때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 이전에 마구 분출되는 교조적 외침이나 흥분은 대한민국은 물론 민족 전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 토론=윤여준 전 국회의원은 "평화.통일.자유.자주가 대다수 국민이 한결같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목표라는 전제 아래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위해 국가목표 설정 과정에서의 원천적인 오해와 혼선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통일을 사회통일과 국가통일로 나누고, 사회통일의 기반이 있어야만 국가통일이 가능하다고 본 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김영희 본사 국제문제 대기자는 "북한 지도부와 국민 중 어느 쪽을 돕느냐는 문제는 대북 지원의 내용과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원기.강병철 기자

December 23, 2006

JO!ns

Übersetzung

„Ohne konkrete Friedensvereinbarung liegen die Friedensbemühungen allein bei der Regierungsspitze“

Gemeinsame Veranstaltung der Konrad-Adenauer-Stiftung und der Peace Foundation: Forum zum Thema „Nach dem Atombombentest von Nordkorea - Suche nach einem möglichen Weg zum Frieden“